

## 유엔상임리사국진출을 위한 일본반동들의 책동과 그 진목적

정진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일본은 경제대국이라고 하면서 교만해지고있으며 오늘에 와서는 정치대국, 군사대국으로 되어보려고 책동하고있습니다.》(《김일성전집》 제77권 114~115페이지)

오늘 일본은 국제사회의 한결같은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기도를 실현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달라붙고있다.

이 글에서는 날로 로골화되고있는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책동과 그를 통하여 노리고있는 불순한 목적을 까밝히려고 한다.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책동은 이미 1980년대초에 시작되어 1990년대에 본격화되었고 새 세기에 들어와 절정을 이루고있다.

제2차 세계대전후 《고도경제성장》을 이룩한 일본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무대에서 정치적 발언권을 높이려고 획책하였다.

1982년 7월 당시 수상이였던 나카소네는 한 연설에서 일본이 세계정치에서 더 큰 발언권을 가지며 경제대국으로서만이 아니라 《정치대국》으로서의 자기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것은 일본의 집권자로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기도를 처음으로 드러낸 망발이었다.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책동은 랭전의 종식과 함께 보다 로골적으로 추진되었다.

1992년 7월 내각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유엔을 외교중심으로 하고있는 일본은 유엔에서 자기의 발언권을 확대할것을 희망하고있다고 하였으며 일본외상도 세계정치에서 지도력을 발휘하는것을 일본외교정책의 목표로 내세우면서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진출하려는 《열망》을 표명하였다.

이러한 배경속에서 일본정부가 1993년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개혁과 관련하여 보낸 편지에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 《개혁방안》이라는것을 《제의》하였다. 그 내용은 첫째로, 상임리사국수를 5개로부터 7개로 늘이고 추가되는 상임리사국은 《응당 안보리사회 결의를 실행하는데서 책임을 질수 있는 국가》로 되어야 한다는것, 둘째로, 비상임리사국수를 10개국으로부터 13~15개국으로 늘이는것, 셋째로, 추가되는 비상임리사국은 응당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 분배해야 한다는것이였다.

일본은 1994년에 있는 유엔총회 연단에서 저들의 상임리사국진출기도를 공식적으로 드러내놓았다.

하지만 일본의 상임리사국제안은 절대다수 유엔성원국들의 랭담한 반응과 회의적태도의 결과로 기각되었으며 일본은 세계의 면전에서 망신만 당하였다.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책동은 1995년 9월 유엔총회 제50차회의를 계기로 또다시 발악적으로 감행되었다.

일본정부는 이해에 기어코 상임리사국자리를 따보려는 야심밑에 유엔총회를 앞두고 일대 외교공세를 벌리면서 국제적지지표를 긁어모으려고 책동하였지만 실패하였다.

새 세기에 들어서면서 유엔성원국들속에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가 제국주의의 강권과 전횡을 막고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능력이 심히 결여되어있다는 인식이 지배하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상임리사국개혁을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특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승인도 없이 제멋대로 이라크전쟁이 감행된 후 유엔의 권위는 땅바닥에 떨어지고 유엔기구체계의 개혁문제는 일정에 오르게 되었다.

유엔무대에서 안보리사회개혁움직임이 활발해진 기회를 타서 일본은 상임리사국자리를 따내기 위한 책동에 더욱더 열을 올리였다.

2004년 9월 일본수상 고이즈미는 유엔총회에서 한 연설에서 지금은 유엔과 안전보장리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역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할 때이라고 하면서 일본이 세계평화를 위해 놓고있는 《역할》은 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될수 있는 공고한 기초로 된다고 력설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05년에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는것을 외교활동의 총적목표로 내세우게 되었다.

상임리사국진출을 노리는 일본의 외교활동에서 기본은 굴종외교와 함께 《재정적지원》과 《경제협조》로 지지자들을 얻기 위한 금전외교였다.

일본은 2004년 9월 유엔총회에 앞서 외무성 부상을 어느 한 나라에 파견하여 유엔총회에서 고이즈미가 상임리사국가입을 지향하는 일본정부의 방침을 표명하게 된다는것을 통보하고 그에 대한 지지를 구걸해나섰다. 한편 일본이 유엔에 재정적으로 크게 기여하고있기때문에 마땅히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유엔성원국들의 지지표를 얻어보려고 책동하였다.

일본당국자들은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투자》와 《차관》을 늘이며 《경제 및 무역협조》에 힘을 넣겠다고 요란스럽게 떠벌이는 한편 막대한 채무를 걸머졌다고 홀시해오던 나라들에 대해서까지 태도를 바꾸어 추파를 던지였다. 이와 함께 일본은 세계인민들속에서 저들의 영상을 개선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위에도 집요하게 매달렸다.

결국 일본은 2008년 10월 제63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진행된 유엔안전보장리사회 비상임리사국 5개국을 다시 선출하는 선거에서 2년 임기의 비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던것이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는 목적은 우선 상임리사국의 특권을 획득하여 패전국의 수치를 씻고 세계적인 《대국》의 대렬에 서서 오래동안 꿈꾸어온 패권주의야망을 실현해보자는데 있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특권이란 한마디로 거부권이다.

일반적으로 거부권은 제기된 법안, 결정 등이 채택될수 없게 하는 권한 즉 해당 법안, 결정채택에 대한 반대권을 말한다. 유엔에서 거부권이라고 부르는것은 유엔헌장 제27조 제3항에 따른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특권적(일치가결)표결권행사이다.

헌장에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절차상문제를 제외한 결정은 전체 상임리사국의 전원찬성을 포함한 9개 리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제되어있다. 상임리사국들중 어느 한 상임리사국이라도 반대투표하면 해당 결정은 채택될수 없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그토록 극성을 부리

는것은 국제무대에서 저들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상임리사국들에 구걸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처지에서 상임리사국의 이 특권을 기어이 획득하여 저들의 비위에 맞게 세계정치를 좌우지해보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이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는 목적은 또한 군사적해외팽창야망실현에 유리한 합법적조건을 마련해보려는데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군사대국화를 추구하여온 일본은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하여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여왔다. 결과 일본《자위대》의 무력은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수준에 이르게 되었다.

2007년현재까지만 하여도 일본 해상《자위대》의 주요전투함수는 150여척으로서 그중 《이지스》구축함, 호위함, 잠수함 그리고 항공모함급의 대형함선들도 가지고있었다.

일본항공《자위대》도 《F-16》급의 주력전투기를 포함하여 최신형스텔스전략폭격기들, 급유기들을 가진 아시아의 제공권을 장악할수 있는 침략무력으로 강화되었다. 룩상《자위대》도 역시 미국신문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일본의 룩상〈자위대〉의 병력수는 영국의 룩군과 해병대를 합친것보다 많다.》고 밝힐 정도로 확대강화되었다.

일본이 이처럼 무력증강책동에 매달리는것은 《방위》가 아니라 무력에 의한 해외팽창야망을 실현해보자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전패국으로서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군국주의적패권야망, 해외팽창야망을 로골적으로 추구할수 없는 처지에 있다. 이로부터 일본반동들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를 획득하는것을 군국주의적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높은 단계로, 필수불가결의 조건으로 간주하게 된것이다.

유엔안보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은 국제분쟁에 대한 유엔의 군사행동을 결정하고 수행하며 군사참모위원회에 참가할 의무를 가지고있다.

일본정부가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군사행동에는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상임리사국진출을 하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위장물에 지나지 않는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되는 경우 일본은 유엔의 《핵심군사력》으로서 자연히 《자위대》의 해외파병명분을 가지게 된다.

일본이 상임리사국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것처럼 날뛰는것은 바로 그 특권적지위를 리용하여 해외파병을 합법화하고 저들이 바라는 곳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의 간판밑에 주동적으로 전쟁의 불을 일으키자는데 있다.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자리를 노리는 목적은 또한 합법적인 핵보유국의 지위를 차지하려는데 있다.

핵보유국들이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지위와 그들의 발언권은 비할바없이 높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핵무장화를 꿈꾸어왔으며 그 실현을 위하여 발광적으로 책동해왔다.

2006년에 영국의 로이터통신은 일본에서 비밀해제된 외교문서의 내용을 통하여 일본은 1970년대 중엽에 벌써 핵무기를 제조하는데 3개월밖에 걸리지 않는 능력을 갖추었으며 핵무기제조에 필요한 기술공정작업의 대부분을 끝냈을뿐아니라 면밀한 설계도를 완성하였다고 까밝혔다.

새 세기에 들어와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임의의 시기에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는 모

든 준비를 완료하였다.

2002년 4월 일본자유당 우두머리 오자와도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수천개의 핵탄두를 생산할수 있다. 일본의 원자력발전소들에서는 3 000~4 000개의 핵탄두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플루토늄을 추출할수 있다. 만일 이런 가능성을 리용한다면 군사적위력에서 우리를 당할자가 없게 된다.》고 한것은 일본의 핵무장화가 얼마나 위험한 단계에 이르렀는가 하는것을 명백히 시사해주고있다.

이처럼 핵무장화의 모든 준비를 갖추어놓은 일본에 있어서 이제 남은것은 핵보유의 합법적구실을 마련하는것이다.

현재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들은 모두 핵보유국들이며 이 나라들의 핵무기보유는 합법적이고 지어 응당한것으로 간주되고있다. 그로부터 이 나라들은 핵사찰에서도 면제되고있다.

이것을 노리고 일본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지위를 획득함으로써 저들의 핵보유를 자연스러운것으로, 합법적인것으로 만들려고 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책동은 위험천만한 망동이 아닐수 없다.

그 위험성은 무엇보다도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침략과 전쟁의 온상이 생겨나게 된다는데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의 수치를 씻고 《대동아공영권창설》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된다면 재생된 일본군국주의가 해외평창의 길에 나서 아시아와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무참하게 유린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실지로 일본은 《자위대》의 해외파병을 계단식으로 확대하여 1992년부터 2002년까지 사이에만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여러 분쟁지역들에 《평화유지군》의 명목으로 《자위대》무력을 파견하였으며 《반테로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반테로대책특별조치법》까지 조작하였다. 그리고 꾸나쉬르섬과 이프로쓰섬을 비롯한 꾸릴렬도의 4개 섬의 령유권을 놓고 로씨야와 분쟁을 격화시키고 조어도령유권을 놓고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고있다.

더우기 엄중한것은 일본이 우리의 신성한 령토인 독도를 강탈하기 위해 온갖 비렬한 책동을 서슴지 않고있는것이다.

이것은 《대동아공영권창설》의 옛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일본의 재침책동이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그 마수가 아시아태평양지역을 벗어나 전세계에로 뻗쳐지고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지고있다.

그 위험성은 다음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며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대표하는 유엔의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키고 나아가서는 그 존재마저 위태롭게 한다는데 있다.

일본은 과거의 죄행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하기는 고사하고 침략과 략탈전쟁으로 얼룩진 최악의 역사를 외곡하고 군국주의망령들을 찬미하며 진정한 반성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정당한 요구에 공공연히 도전하고있다.

최근시기 일본의 집권자들은 군국주의망령들의 위패가 보관되어있는 야스구니진자참배를 빼앗아 진행하고있으며 외곡된 역사교과서리용을 합법화하였다. 뿐만아니라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요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저들의 야수적인 성노예범죄만행을 고발하는 조각상, 추모비들을 없애버리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

철면피하고 후안무치한 일본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의 자리에 기여오른다면 세계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며 국제적정의와 공정성을 보장할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장 큰 정부적국제기구인 유엔이 자기의 사명을 다할수 없는것은 물론 자기의 존재자체를 유지할수도 없게 될것이다.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국제적정의와 량심의 대변자로 되어야 할 유엔 그자체를 파괴해버릴 일본의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진출책동은 결코 용납될수 없다.

과거 일본군국주의의 침략의 직접적피해자들인 아시아태평양지역 나라들을 비롯한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이 새 세기에 들어선 오늘까지도 죄많은 과거청산을 한사코 회피하고 오히려 지난날의 범죄적인 침략사를 미화분식하면서 재무장, 재침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일본의 상임리사국진출을 허용하려 하지 않고있다.

2005년 유엔주재 중국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상임리사국진출에 대해 아시아사람들이 여러가지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있으므로 이 지역에서 합의를 얻는것은 불가능하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로스안젤스에서 우리 나라와 중국, 미국, 필리핀, 네덜란드, 일본의 반전단체들이 참가한 국제토론회에서도 일본이 군국주의과거와 결별하지 않고서는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상임리사국으로 될수 없다는것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2005년 3월 프랑스대통령도 일본방문을 앞두고 《아사히신붕》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이웃나라들과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려면 과거의 일을 받아들이는것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과거청산문제에서 일본은 도이첼란드를 본받아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미국회 하원 의원 코넬리는 역사를 묵살하려는 일본정객들의 행위에 대하여 경악을 표시하고 수상 아베에게 야스구니진자참배와 도발적인 발언으로 이에 동조해왔다고 비난하면서 과거 일제에 의해 감행된 식민지통치의 죄악을 명백히 인정할것을 요구하였다.

이것은 도덕적미숙아, 정치난쟁이 일본에 대한 질시인 동시에 분수에 넘친 상임리사국진출기도에 대한 조소이다.

일본반동들은 자기 처지를 알아야 하며 《정치대국》의 헛된 꿈을 꾸기에 앞서 과거죄행에 대하여 인정,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유엔상임리사국, 《정치대국》